

배포 2024. 12. 9.(월) 08:30

보도시점 (인터넷) 2024. 12. 9.(월) 12:00
(지 면) 2024. 12. 10.(화) 조간

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
- 「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5~2027)」 발표
- 인공지능(AI)·데이터 기반 안전관리, 체험형 안전교육 내실화,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등 중점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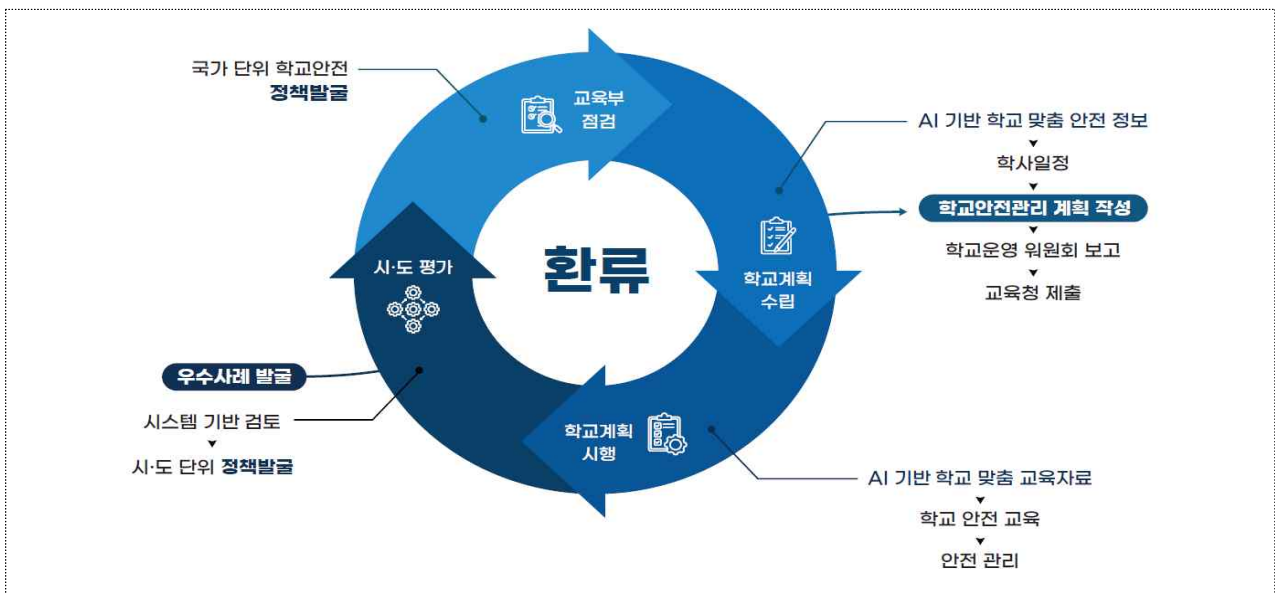
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)는 12월 9일(월),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「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5~2027)」을 발표한다.

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

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*를 심화·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으며, ‘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 생태계 구축’을 목표로 한 ①인공지능(AI)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, ②현장 중심의 안전교육, ③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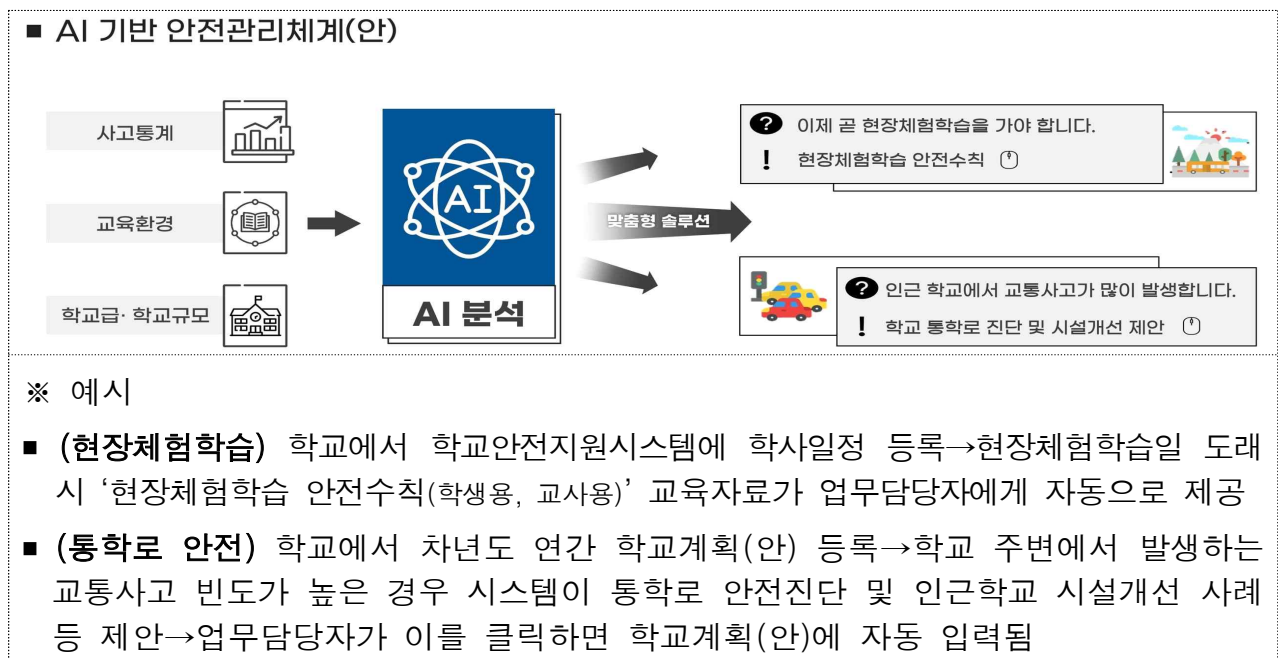
* △학교안전업무 통합시스템 구축, △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확대, △안전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등

① 인공지능(AI)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



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(건수, 유형), 학교급,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‘인공지능(AI)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’을 도입하고,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‘학교안전지원시스템’을 새롭게 구축한다(2025.1. 개통).

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‘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’과 ‘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’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. 또한 ‘학생안전 자가진단’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.



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·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집중호우·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‘재난 예측 정보’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, 피해 상황을 학교-교육청-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.

향후,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하여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.

②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(인프라) 확대

기존에는 ‘지진’, ‘화재’ 등 단일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으나,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*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 자료를 새롭게 개발·보급한다.

* (복합재난 예시) 지진 발생 시 화재와 붕괴 동시 발생, 집중호우 시 침수와 침하 동시 발생

‘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’을 지속 확대(2027. 1,000개교)하고, 도서벽지·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·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‘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’ 및 ‘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’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.

아울러,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1개 이상 건립 추진하고,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, 이동형,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.

③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

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과속방지턱, 안전 울타리, 인도 진입 방지물(볼라드) 등을 지속해서 늘려가고, 내진 보강(~2029년), 석면 제거(~2027년), 화재예방 시설 확충(~2026년) 등 학교 시설·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.

한편,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,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한다. 또한 학교 밖 놀봄,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(‘공제급여’)을 정비하고,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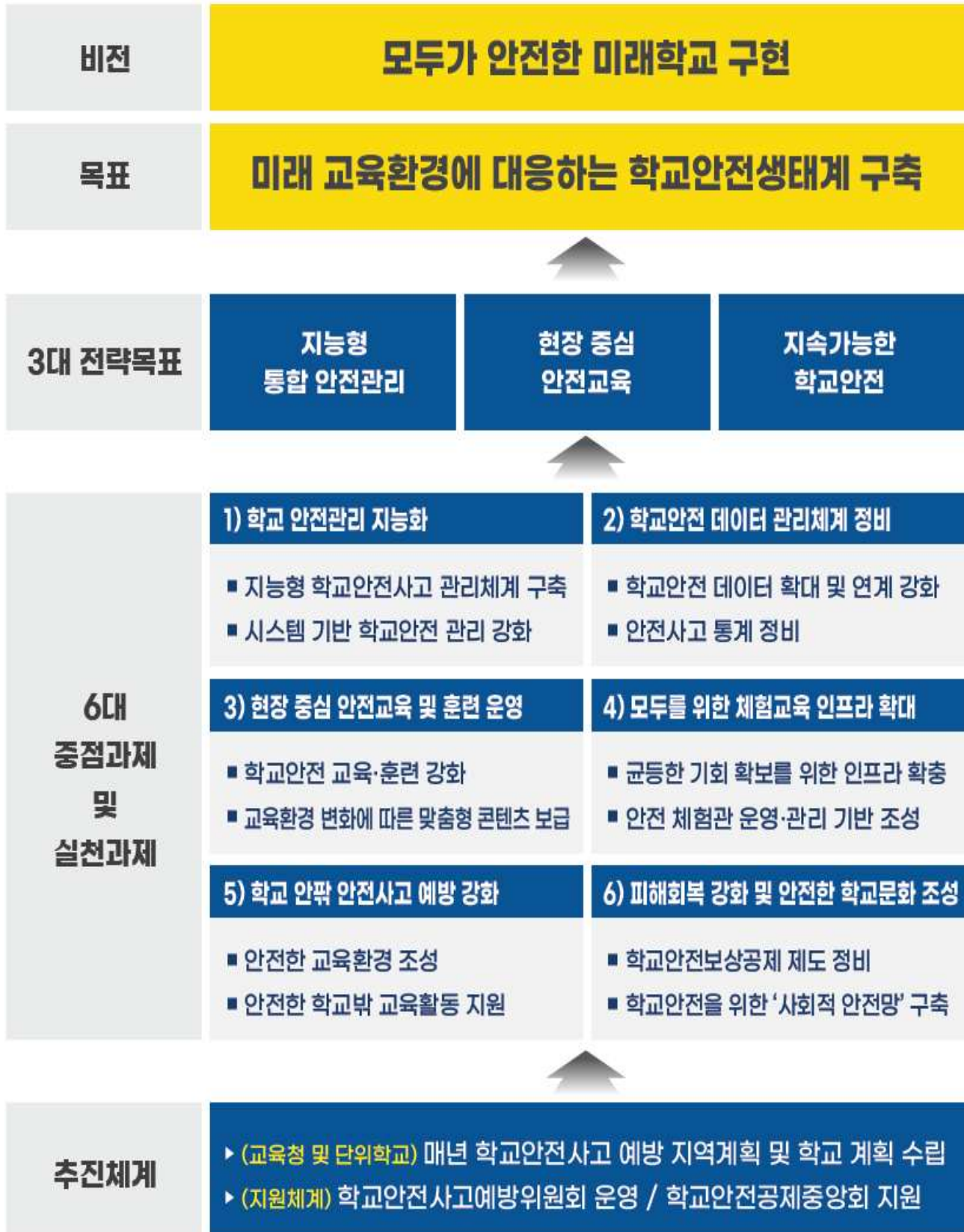
대국민 안전 운동(캠페인), 안전 점검의 날 계기 학부모 교육,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,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-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.

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“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·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·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별첨】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(2025~2027)

담당 부서	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용하 (044-203-6657)
		담당자	서기관	최경자 (044-203-6658)
			주무관	이학희 (044-203-6660)

1. 비전 및 목표



2. 주요 추진과제

① 학교 안전관리 지능화

- (AI 기반 학교안전 관리) 학교유형·사고 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'AI 예측사고 모델' 도입, 학교특성에 맞게 안전관리·교육 제시
 - ※ (기존) 전년과 비슷한 학교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
 - (개선) 과거 발생한 사고, 학교급·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시행
- (시스템 기반 재난관리) 시스템 활용하여 재난 피해예측 안내, 학교-교육청-교육부 간 상황대응 등 실시간 재난 파악 및 적기 대응
 - ※ (기존) 교육청-교육부 간 상황대응체계 / 학교 피해 등 파악하는데 만나질 소요
 - (개선) 학교-교육청-교육부 간 상황대응체계 / 학교 피해 등 실시간 파악

② 학교안전 데이터 관리체계 정비

- (학생안전 자가진단 개발) '학생안전 자가진단(SSA: School Safety Assessment)'을 통해 고위험진단 맞춤 생활지도·안전교육 실시
 - ※ (개선)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학교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가능
- (데이터 연계 및 정비) 기관별 산재된 안전데이터(교육시설, 교육환경정보, 사고 현황 등)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하고 전(全) 학교급 데이터 정비
 - ※ (기존) 산재된 기관 데이터 + 초·중·고교 학교안전 데이터만 관리
 - (개선)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+ 유아~대학까지 전 학교급 데이터 관리

③ 현장 중심 안전교육 및 훈련 운영

- (신종 복합재난 대응) 복합재난별 시나리오 중심 교육훈련 보급,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확대 및 모든 학교구성원 대상 안전연수
 - ※ (개선) 기후환경, 복합재난(지진+화재 등) 등에 대응한 안전교육·훈련 실시
- (안전취약계층 교육 확대) 도서벽지, 농산어촌 학생 대상 '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' 지속 확대, 다문화·장애학생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보급
 - ※ (개선)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 기회 확대

4 모두를 위한 체험교육 인프라 확대

- (체험 중심 인프라 확대) 17개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설립하고, 다양한 유형(소규모형, 교실형, 이동형 등)의 체험관 확대
※ (기존) 광주, 울산, 대전, 제주, 강원 종합형 체험관 미설립
(개선) 울산, 전북 등 종합형 체험관 신규 건립 추진
- (안전취약계층 인프라 확보) 체험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및 장애학생 전문 체험시설(이동형 차량·교실 모듈러 등) 확충, 교직원 전문 체험관 신설
※ (개선) 장애학생 맞춤 체험시설 확보, 교직원 전문 체험관 신설

5 학교 안팎 안전사고 예방 강화

- (안전한 통학로) 학교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과속방지턱, 안전펜스, 승하차존 등 교통안전 인프라 지속 확충 ('25. 90개교 예정)
※ (기존)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점 지원
(개선) 학교현장 위험요인 점검 및 수요 조사 +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 지원
- (안전한 교육환경) △내진 보강(~'29년 완료), 석면제거('27년 완료), 화재 예방시설 확충('26년 완료) 등 시설 개선 △미세먼지 빈발 전후 점검·교육 등
※ (개선) 내진·석면제거 등 조속한 추진 + 노후화된 학교시설 성능 개선 중점 지원

6 피해회복 강화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

- (공제제도 정비) 학교밖늘봄, 유보통합 등 신규 안전사고 유형·대상 확대를 위한 공제제도 정비 및 장기치료 학생까지 학습결손 지원 확대
※ (개선) 새로운 유형 대비 공제제도 및 시도공제회 보상표준안 마련 등
- (사회 안전망 구축) 대국민 안전캠페인 확대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조성, 학교안전 분야별 관계부처(기관) 협의체 활성화 등
※ (개선) 안전점검의 날 학부모 교육, 인센티브 지속 확대, 학교안전 관계기관 역할 강화